

문제 없었다던 광주시 공모 사업, 특혜 의혹 사실로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설계 공모, 청탁 받고 특정업체에 특혜 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심사위원 명단 유출...공무원 등 9명 검찰 송치
'법적·행정절차상 문제 없다'고 공언했던 광주시 행정 신뢰성 크게 훼손

광주시가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사업과 관련해 "법적·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사업 관련자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돼 광주시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경찰청은 3일 광주시 Y프로젝트 사업 설계공모를 담당했던 공무원 2명과, 공모 참가 업체 관계자 2명, 심사위원 5명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무원들은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업체 관계자와 심사위원들에게는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진행된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의 설계 업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주고받으며 특정 업체가 당선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은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산동고 일원에 4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지상 3층, 연면적 4000㎡ 규모)과 1000㎡ 규모 실내인공서핑장, 1만㎡ 자연형물놀이장, 1만1800㎡ 잔디마당 등 사계절 복합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모 과정에서는 1차 응모를 통과한 5개 업체가 최종 심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1개 업체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 때 공무원들은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심사위원 명단을 업체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공모 관리자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해당 업체에게 유리하게 수정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위원들은 심사가 이뤄지기 전 해당 업체로부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심사를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심사위원 중 1명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1000여만원의 청탁성 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가 지역사회 내 친분 관계를 앞세워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윗선이 개입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모 탈락업체들로부터 "당선 업체가 설계 지점을 어겼는데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공모안을 수정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6월에는 광주시 실무 부서인 신활력추진단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강시장은 박성주 당시 광주경찰청장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정례 조회에서 "개X 같은 이야기"라는 등 격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당시 광주시 측은 지난 5월 26일 광주지법이 공모 탈락 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설계공모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는 점을 들어 "경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주장을 폈다.

광주시 관계자는 "추후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 당사 업체의 비리 등이 사법절차에서 확인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경찰의 송치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계약은 '중지' 상태로 전환했고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확정될 경우 계약은 '취소'된다"면서 "수사 대상이 '개인' 사안이어서 시에서는 수사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없어 기소 여부 및 재판 경과를 지켜보되, 그 전까지는 계약 중지 상태를 유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능 대박 기원 '교실은 열공 중'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10일 앞둔 3일 광주시 남구 대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이 막바지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 근로감독 강화? ...광주·전남은 인력 부족·과다 업무 시달려

광주청 근로감독관 223명 불과

정부가 임금 체불,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으나, 정작 광주·전남 지역 근로감독 현장은 인력부족과 과도한 업무, 숙련자 부족 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기준 223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지난해 맡은 신고사건은 3만8269건에 달했으며, 인·허가 8330건, 사업장 감독 2857건도 처리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한 사람이 221개 넘는 사건을 처리한 것이다.

광주지청의 경우 근로감독관 100명이 신고사건

1만8790건·인허가 3773건을, 목포지청은 22명이 3786건·699건을, 여수지청은 31명이 4992건·1209건을 맡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감독관들 사이에서는 신고 사건, 인허가를 처리하는데도 벽찬데 사업장 감독 일까지 더해지면서 감독 행정 업무가 '사건 처리 중심'으로 기울고, 예방과 구조 점검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저연차 퇴사율도 높아 근로감독 업무의 깊이도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5년(2021년부터 올해 9월 까지) 일반퇴직자 중, 정년· 명예퇴직을 제외한 퇴직자 가운데 근속기간 5년 미만 공무원 비율은 70.4%에 달한다. 조직에 적응해 전문성을 쌓기도 전에 떠나는 비율이 10명 중 7명 수준인 것이다.

높은 업무 강도에 신규 충원도 매끄럽지 않다. 국

민의회 김소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공채 국가직 일반행정 합격자 348명 가운데 155명, 지역구분 모집 합격자 184명 중 77명이 고용노동부에 배치됐다. 저소득·장애인 전형을 포함해 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인원은 249명인데, 이 가운데 61명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중앙정부 근로감독관 3050명, 지자체 근로감독관 1850명 등 모두 4900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저연차 퇴사율이 높은 현실에서 단순 증원이 곧바로 현장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의원은 "경직된 조직문화와 낮은 보수 등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면 노동부는 노동정책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김희수 진도군수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송치

김희수 진도군수가 골재 채취 업체 대표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3일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김 군수와 골재 채취 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23년 진도군 진도읍에 사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소나무, 골재(자갈 등) 등 수천만원 상당의 자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진도군 내 포괄적인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만큼, A씨로부터 받은 자재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김 군수가 A씨 업체로부터 청탁과 뇌물을 받고, 경쟁업체의 항만시설 사용을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A씨 업체의 경쟁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진도항을 이용해 토석을 운반하다 김 군수 취임 이후 골재 채취 불허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조치가 김 군수와 A씨 간 밀접한 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나쁜 개주인

대형전 목줄 안 채워 4명 몰어 중경상 입힌 견주 금고 4년 선고

공격성이 높은 대형견을 담벼락 없는 마당에서 키우면서 목줄을 채워두지 않아 택배원, 산책하던 인근 주민 등을 몰아붙여 중경상을 입힌 견주가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동물보호법위반·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고흥군의 한 주택에서 도고 가나리요, 불코다브 등 공격성이 높은 대형견 두 마리를 키우면서 목줄을 채워두지 않아 택배원 등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개들은 지난 2024년 3월 24일 주택에서 15m 떨어진 해안도로에서 지나가던 50대 남성의 다리를 몰아붙여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 22일에도 주택에서 15m 떨어진 곳에서 50대 택배원의 엉덩이를 몰아붙였고, 10월 9일에도 10대 택배원의 다리를 몰아붙였다. 11월 3일에는 주택에서 40m 떨어진 해안도로에서 산책하던 60대 남성의 얼굴, 성기 등을 몰아붙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개물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뺏으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A씨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위험성 또한 높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창고 매 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